

정부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용수 문제없다”

기후부·산자부 국감서 호남반도체 산단 집중 질의

김성환 “6.3GW·65만t 공급 가능…송전망 신속 추진”

김정관 “광주 군공항 이전, 미군과 협의…큰 문제 없어”

국감 현장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2030년 첫 양산을 위한 추진 방안이 6일 국회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 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 6.3GW와 하루 65만t의 용수를 지역 내에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재차 밝혔다.

김 장관은 호남 전기 생산·소비량을 고려하면 반도체 산단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6.3GW(기가와트)의 전기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신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호남에서 생산한 전기로 (반도체 산단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전력과 전문가의 평가”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호남은 그간 산업 수요가 없어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에 올려보내는 일만 해왔다”면서 “그간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 3~5GW가 호남에서 쓰이지 않고 수도권 공급용으로 보내졌다”고 설명하며 호남 내 발전 설비만 활용해도 반도체 산단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도체 산단 공급용수 공급과 관련해서도 김 장관은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반복했다.

김 장관은 “호남은 산업 수요가 매우 부족해 영산강과 섬진강 물 대부분이 농업용수나 하천유지용수로만 쓰여왔다”면서 “가뭄 이야기도 있으나 이는 전국적 사안이라 이에 대한 대응은 별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호남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6.3GW 전기와 하루 65만t의 용수는 여러 면에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규모”라면서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의 부지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의 관련 질의에 “기업이 생산 부지가 필요했고, 정부는 제안했고 최종 결정을 기업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서남권 (호남)을 선택했다”며 “투자하겠다고 기업이 먼저 제안해온 부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기업에 문의해봤는데, 기업은 일관되게 특정 지역을 애기한 적이 없고, 서남권 투자계획을 밝힌 적도 없다고 한다”며 “정부 말이 맞는 건지, 기업의 말이 맞는 건지 진실공방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다양한 부지를 제안했을 때 호남 이외 지역도 제안한 적 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여러 지역이 있었고, 당연히 비호남 지역도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정진욱 의원 (전남광주동남갑)은 산업통상부 국감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일정을 더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9월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께 ‘28년 중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완료한다 이 일정이 너무 늦다 1년은 최소한 앞당겨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9월 29일 대통령께서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 지시를 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현재 관련해서 국방부와 미군이 지금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다”면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00조원씩 총 800조를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 팹 (Fab·생산공장) 4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후 광주 군공항 일대가 일지로 확정됐으며 정부는 2029년 첫 팹 준공, 2030년 양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6일 전남광주통합특설시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5차 발사를 위한 발사대 기립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다중촬영). 누리호는 발사 운용 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추진제(연료, 산화제) 충전을 한 뒤 7일 우주로 향할 예정이다.

사진제공=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도시’ 고흥서 누리호 5호기 오늘 ‘우주로’ 발사

향우연, 발사 가능시간 낮 12시23분~오후 1시23분 예상

발사대 기립·고정장입 완료…우주발사전망대 특별 운영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5차 발사를 하루 앞둔 6일 제2발사대에서 기립과 고정 작업을 마치고 우주비행을 위한 최종 준비에 들어갔다.

우주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6일 오전 10시 35분 전남광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발사대 기립 및 고정장입이 완료됐다고 전했다.

앞서 향우연은 5일 오후 6시 30분 발사 준비위원회를 열고 기술적 준비 상황과 기상 상황 등을 검토해 누리호를 발사대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누리호는 이날 무인특수이동차량(트랜스포터)에 실려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대

종합조립동에서 제2발사대까지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이동했다.

누리호는 기립 장치인 ‘이렉터’에 실려 발사페드에 수직으로 세워진 뒤 발사대에 고정됐다.

발사 가능 시간은 7일 낮 12시23분부터 오후 1시23분 사이다.

우주항공청은 이날 오전 발사관리위원회 회를 열어 추진제 충전 여부와 기상·우주 물체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최종 발사 시각을 결정한다.

이번 누리호 5차 발사의 특징은 역대 최다인 15기의 위성을 한꺼번에 싣는다는 점이다.

주탑재위성은 KAIST 인공위성연구소가 개발을 총괄한 초소형군집위성 2~6호 5기다. 각 위성은 100kg 미만으로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반복 관측해 국가안보와 산발·홍수 등 재난·재해 대응에 활용된다.

이번에 5기가 먼저 발사되고 나머지 5기는 내년 누리호 6차 발사를 통해 우주로 향한다.

총 10기의 군집체계가 갖춰지면 한반도 일대를 하루 3회 이상 촬영하고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같은 지점을 24시간 안에 다시 관측할 수 있게 된다.

부탑재위성으로는 산학연이 개발한 큐브위성 10기가 실린다. 해양쓰레기와 미세먼지, 우주방사선 등을 관측하는 위성부터 국산 반도체와 우주용 부품, 의약품을 실제 우주 환경에서 검증하는 위성까지 임무도 다양하다.

지역에서는 조선대학교가 참여한 ‘시피셋’도 우주로 향한다. 조선대는 위성 개발에 참여해 우주 통신 기술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한편 고흥군은 ‘누리호’ 5차 발사를 앞두고 우주발사전망대를 특별 운영한다.

나로우주센터에서 직선거리로 약 17km 떨어진 우주발사전망대는 발사 장면을 조망할 수 있어 관람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군은 전망대 주변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우주발사전망대 주차장 153면과 통일발전지원공원 주차장 104면 등 지정 주차장 257면을 운영한다. 교통·주차관리 인력과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보건소 응급의료지원과 경찰 교통 통제 등 대응체제가 가동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전남대병원 병상가동률 19.3%p 하락

2023년 대비 2025년 감소폭, 국립대병원 9곳 중 네 번째

전남대병원의 지난해 병상가동률이 의정갈등 이전인 2023년보다 19.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핵심 의료기관의 병상 운영이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진료 인력과 기반 확충이 과제로 떠올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의 2025년 병상가동률은 2023년 대비 19.3%p 떨어졌다. 조사 대상 국립대병원 9곳 가운데 충북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경북대병원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감소폭이다.

병상가동률은 병원이 보유한 병상을 실제 입원환자 진료에 얼마나 활용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전남대병원은 지역의 중증·응급의료와 필수요를 맡고 있는 만큼 병상가동률 하락이 지역 환자의 치료 접근성에 미친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른 지역 국립대병원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국립대병원 9곳의 평균 병상가동률은 2023년 73.6%에서 2024년 56.4%로 떨어진 뒤 지난해에도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제시된 수치 기

준으로 2년 사이 17.2%p 하락했으며, 지난해에는 평균적으로 병상 10개 중 4개 이상이 비어 있었던 셈이다.

수술 건수는 2024년 급감한 뒤 지난해 일부 회복했으나 의정갈등 이전에는 미치지 못했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10곳의 수술 건수는 2023년 19만3213건에서 2024년 12만8231건으로 33.6% 줄었다. 지난해에는 14만 5810건으로 늘었지만, 2023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4만7403건, 24.5% 적었다.

국립대병원의 진료 가능 회복은 지역 필수의료 강화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올해 8월 국립대병원 소관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가운데 복지부는 앞서 6월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진료·연구·교육·공공정책 기능을 강화해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의 최중치료 역할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서 의원은 의정갈등과 지역의료 공백으로 위축된 국립대병원의 진료 역할 증진에 적극 화해해야 한다며, 지역 중증·응급요를 책임질 수 있도록 인력과 진료 기반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반도체 건설에 조선·철강 인력 유출 우려”

김원이, 산자부 국감서 질의…김정관 “관련 문제 점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목포)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구축에 필요한 숙련 인력 확보와 주변 조선·철강산업의 인력 공백에 대비한 정부의 상생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광주 군공항 일원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구축을 추진 중이다. 오는 2028년 반도체 팹 착공과 2030년 6월 첫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반도체 건설업체 제출 자료를 취합한 결과, 광주 반도체 건설현장의 일일 기능인력 투입 규모는 오는 2028년 말 1453명에서 2029년 말 2만3268명, 2030년 말 3만1567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같은 시기 용인 등에서도 반도체 공사가 진행돼 숙련인력 확보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반도체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용접·배관·전기 등의 숙련인력이 주변 조선·철강산업에서도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통상부 등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서남권 조선업 (HD 현대삼호·대한조선)의 전체 고용인력은 약 1만 4000명, 동부권 철강산업 관련 건설 기능인력은 6100명이다.

두 인력을 합하면 약 2만 명으로 반도체 팹 1기 건설에 하루 투입되는 인력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김 의원은 반도체 공사가 본격화되면 수요가 겹치는 직종의 숙련인력이 광주 건설현장으로 이동해 기존 산업에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인력수급을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이성오 기자 sole235@gwangnam.co.kr

기업 투자 필요한 행정 지원·기반시설 확보

▶1면에서 실제 기업 자원에서는 광주의 시설 부족을 전남의 기반시설로 보완하는 협력이 이뤄졌다. 통합시와 장성군·선·철강산업에서도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합시는 이 같은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 투자에 필요한 행정 지원과 기반시설 확보를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별 지역 안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주변 지역의 시설·자원과 연결하는 방식이 산업정책에도 적용되고 있다.

반도체 사업과 맞물린 군공항 이전도 통합시가 맡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참여와 지원을 요청하고 이전 지역 자원 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무안이 이전 후보지로 선정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 주민 투표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지만, 광주와 무안이 같은 광역정부 안에서 사업을 협

의하는 체계가 마련됐다.

군공항 이전과 국가산업단지 조성, 전력·용수 공급은 각각의 절차를 밟으면서도 서로 일정을 맞춰야 하는 사업이다. 통합시는 산업 투자와 지역 현안을 함께 다루며 정부, 시·군, 기업 간 협의를 이어가게 된다.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통한만의 결과로 볼 수는 없지만, 사업을 뒷받침할 행정과 자원을 함께 운영할 여건은 달라졌다. 두 지역이 보유한 산업 기반을 연결하고 투자 과정의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 출범 이후 나타난 변화다.

새 조직 가동 이후에는 이러한 협력을 실제 사업 진척으로 이어가는 작업이 본격화한다. 반도체 산업용지 확보와 전력·용수 공급망 구축, 기업 투자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등이 주요 후속 사업이다. 통합시는 출범 초기의 조직·제도 정비에 이어 대규모 투자계획을 실행할 행정 지원과 기관 간 협의에 나서게 된다.